주제 5

권역별 대학구조개혁의 진단

강원권

김 송 희 | 강원대학교 평의원회의장

2004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추진안이 발표되면서 강원지역에서도 국립대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의 재정비에 대한 발빠른 협의를 위하여 4개의 4년제 국립대학교와 전문대학인 원주대학을 포함한 총·학장 모임이 2004년 12월 21일 개최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도내 기획처(실)장들이 통합실무추진위원회 재구성 및 총장 합의문 마련, 추진 일정들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0일 강릉대학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후 2005년 1월 27일 강릉대학교에서 강원지역국립대학 총·학장들이 모여 연합/통합 추진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대학별 연합/통합 관련 의사는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각 대학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 강원대학교 : 통합
- 강릉대학교 :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원칙으로, 대학 간 통합은 양자(혹은 다자) 간 협상을 통해 진행
- 삼척대학교 : 통합
- 춘천교육대학교 : 연합/통합
- 원주대학 : 5개 대학 간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개별 대학 간 통합 논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별로 통합/연합 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랐으며, 그 이유는 대학 자체가 처한 현실과 대학의 장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대학별로 의견 차이를 보이던 중 대학통합이라는 같은 의견을 표현한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년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3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가졌으며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제시 및 의견조율을 하였다.

2005년 3월 17일 삼척대학교에서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이 열렸고, 본격적인 두 대학통합을 위하여 양 대학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대학별로 5명씩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가동되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대학구조, 대학운영 및 교명, 캠퍼스명, 캠퍼스별 특성화 및 차별화, 직제조정, 학과의 이동과 통폐합 등에 대한 양 대학의 의견조정,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모델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양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겠지만, 양 대학 총장들이 머지않아 통합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척대학교 측에서는 대학구성원, 지역사회 및 동문회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를 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에서는 4월 12일 강원대학교평의원회 주최로 통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 대학의 학과나 학부 명칭이 유사한 점이 많은 강원대학교 공과대학과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비교적 다수의 교수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나머지 다른 학부나 학과에서는 많은 교수들의 의견이 통합의 필요성과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통합을 허용한다는 분위기였으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두 대학의 통합으로 강원지역의 모든 국립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강원대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두 대학의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릉대학교에서는 원래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통합은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으며, 이미 2004년에 삼척대학교와의 통합을 논의하던 중 양측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통합이 무산되자 원주대학과의 통합에 주력을 하며 통합추진위원회를 가동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원주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추진안 발표 이전에 이미 몇 차례에 걸친 강원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바 있었으나, 현 학장취임 후에 강원대학교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갖자는 제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학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더 이상 국립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을 허락할 가능성이 적음을 인식하여 최근 타 대학과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와 원주시장 및 원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원주대학통합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차로 강릉대학교와 양교 통합추진위원들이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통합에 대한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주대학은 통합에 대하여 강릉대학교뿐만 아니라 충주대학교, 강원대학교와의 통합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빠른 시일 안에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된다.

한편 강릉대학교는 최근 원주대학과의 통합추진이 정해진 시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또한 삼척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통합추진이 계획대로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삼척대학교와의 통합추진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는 두 대학의 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대학구조조정계획안을 교육인적자

원부에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강릉대학교가 참여하면 이를 환영하고 3개 대학이 통합하는 수정안을 그 후에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초 강릉대학교에서는 평교수들의 모임인 교수협의회에서 본부가 주도하는 대학의 통폐합추진이 미진하자 강릉대학교 통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통합유형과 방법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다른 11개 교육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장려하는 국립대학 통합원칙에 반대하고, 독자적인 전국 11개 교육대학이 모여서 한국교육종합대학교 시스템구축을 2006년까지 하고, 2007년~2009년까지 연합교육대학체제인 한국종합교육대학체제로 가고, 2010~2012년 사이에 지역 간 캠퍼스 통합단계로 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강원도 내 국립대학 통합추진 상황은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간의 통합추진 외에는 가시화된 것이 없다. 두 대학의 추진이 현실화되면 강원도 내의 통합하지 않은 다른 국립대학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나머지 대학들도 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본다.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명실 공히 강원도 내 전체 국립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추진이 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두 대학 외에 다른 대학들이 통합의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각 대학이 처한 입장이 다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대학구성원들과는 달리 대학의 총·학장들이 대학전체의 대의명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학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교수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음을 주지해야할 것이다.

김송희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였고, Monash University (Australia)에서 재료공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Monash University(Australia), Brown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하였고, 현재 강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재료공학도를 위한 제도 및 설계』, 『금속 강도학』, 『컴퓨터에 의한 제도 및 설계』 등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충청권

홍 성 표 | 충남대학교 기획정보처장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분히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교수들의 연구논문 수 등의 지표를 포괄적으로 감안할 때, 세계 100위 안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어려움은 양적인 측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2003년부터 본격화된 학령인구와 대학정원 간의 역전현상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미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는데, 대학의 미충원은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극심해서 이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4년만 보더라도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16.1%나 되고, 학령인구가 현 대학정원의 7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2030년 경에는 대학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그 와중에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질적·양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계획은 있어왔으나 지금의 정책은 과거의 정책과는 궤를 달리 할 정도로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다 하겠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 간 통합과 대학 내 획기적인 구조개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실제로는 하나로서 단순한 대학 수 줄이기의 통합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단일대학으로서 성공하기 어려운 특성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국가적인 구조개혁의 추세 속에서 대학 간 통합이냐, 혹은 강도 높은 자체 구조개혁이냐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한편 우리 지역 내 공주·연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행정도시 건설은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충남대학교에 엄청난 변수로서 다가왔다. 빈 곳이 생기면 어떤 것에 의하여 채워진다는 것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서도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지역에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대학의 수요가 있게 되고 자연적으로 어떤 대학이라도 조건과 수준이 적합한 대학이 행정수도 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곳에 수도권의 사립대학이 외국의 명문대학과 결합하여 진출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교육여건은 황폐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도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데, 지역에 수도권의 다른 사립대학이 위치하면 우수학생 유출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아울러 우수학생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양적 이동도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대학들 중 상당수의 대학들이 재정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대학들의 도산은 다시 지역의 교육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활력을 상실할 것이 예상된다.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는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지역의 교육을 보호하고 지역을 사수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인식에 있어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의 입장이 정확히 일치하였다. 즉, 두 대학 모두 통합이 양 대학 모두에게 상승효과를 안겨주는 윈-윈(win-win) 전략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물론 향후 통합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권역 내 다른 국립대학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더불어 지난 수개월간 충남대학교와 통합작업을 진행하다가 최근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합을 포기한 충북대학교에도 행정도시 내 국립대학건설 공동대응이라는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겠다.

비록 당초에 계획되었던 행정수도가 좌절되고 그 대안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다소

약화된 기능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도시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행정도시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고 그곳에 위치할 통합대학의 의미도 클 수밖에 없다. 두 대학교의 통합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권역 내 일반대학 간 통합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구조개혁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두 대학교의 통합은 여러 가지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권역의 교육, 지역경제, 지역사회의 보호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두 대학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특성화를 통하여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국내 제일의 국립대학교를 충청권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배출하여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주·연기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역을 아우르는 국립대학교의 재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대학의 통합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과연 전례가 없는 두 일반국립대학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예상했던 규모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우리대학이 흡수되는 것은 아닌가, 지역의 대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졸업한 모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등 여러 걱정과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이견과 우려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두 대학의 통합목적과 치밀한 통합방안, 그리고 전략으로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두 대학의 통합이 워낙 장기적이고 대형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행정도시 내 부지를 확약 받을 때라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통합대학설치령의 제정·공포는 두 대학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리고 행정도시 내 부지확보는 단기적으로 두 대학 통합을 가능케 하고 특성화를 이루게 하는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본부가 행정도시에 위치하여 충청권 전역의 구조개혁 중심본부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치사항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하여 두 대학교의 통합의 특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요구된다.

충남대-공주대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구성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함은 어쩔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대학의 통합이 지니는 의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이견과 의구심에 대하여 때로는 탄탄한 논리로서 이해시키고, 때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발전이라는 동지의식으로 호소하며 정부에 대하여는 두 대학의 통합이 갖는 국가 발전적 측면을 이해시키면서 한발 한발 통합을 향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홍성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tony Brook)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York University(Canada)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영·경제 수학』, 『기초계량경제학』 등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영남권

백 종 국 | 경상대학교 기획연구처장

영남권의 대학 통폐합 논의는 2004년 4월의 경상대-창원대 통합양해각서 체결이 그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영남지역에서 진행된 대학의 통폐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68년에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이 통합하여 영남대학교로 탄생하였고, 1995년에는 통영수산전문대학이 경상대학교 해양대학으로, 1995년에는 대구가톨릭대와 효성여대가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로, 1996년에는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부경대학교로, 2000년에는 지산대학이 부산가톨릭대학교로 흡수 통합되었으며, 2003년에는 성심외국어대학이 영산대학교로 통합되었다. 단과대 수준이 아닌 종합대학교 대 종합대학교의 거대 통합 노력은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상대-창원대의 통합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영남권역의 대학통합 논의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급속히 진행되었다. 2004년 10월에는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가 통합안을 공동작성하였고, 12월에는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구조개혁 공동연구단을 발족하였다. 2005년에 접어들면서 교육부가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가 경남권역, 대구경북권역, 부산권역에서 차례로 출범하였다. 이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대통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004년 4월의 경상대-창원대 통합 논의는 사실상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창원대학교 소속의 일부 교수들이 양 대학의 통합을 제의하고 경상대학교의 교수회가 찬성률 97%로 동의하였으나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였다. 양 대학교의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양 대학 통합의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상대학교는 지역의 거점대학교이면서도 명칭이나 지리적 위치에서 약점을 안고 있었다. 창원대학교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중소규모 대학으로 그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역내에서나 역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지라도 빈번히 과다한 경쟁비용과 규모의 경제미달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만일 통합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이 있는 특성화가 달성되리라보고 있다.

2004년 11월에 경상대-창원대 통합추진위가 상정한 통합안을 보면, '경남국립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주소지를 진주캠퍼스에 두는 대신 창원캠퍼스에도 본부 부처의 일부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단과대학은 진주에 수의대, 농생대, 사범대, 의대, 해양대, 항공우주대, 생명과학대를 두고, 창원에 사회대, 경상대, 공대, 예술대, 법대를 두며 인문대와 자연대는 양 캠퍼스에 함께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중심대학에 걸맞는 교원 산출기준과 책임 시수의 하향 조정 및 교직원과 조교의 대폭 증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상정안의 처리를 창원대학교의 교수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현재까지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상대-창원대의 통합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산대-밀양대의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2004년 7월에 밀양대에서 부산대에 통합의향서를 제출하자

양측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까지 통합안을 작성하였다. 2005년 3월에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각각 이 통합안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타진한 바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이 달 31일에 마침내 통합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각서에 따르면 양 대학은 2006년 3월에 첫 통합대학의 학생을 모집하게 될 것이다.

통합과 함께 두 대학의 유사 중복학과는 모두 부산대학교에 통합되고, 나머지 밀양대학교의 3개 단대와 산업대학원도 폐지된다. 대신 밀양캠퍼스에는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이 신설되고 로스쿨 최종심화과정, 어학캠프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의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부산, 밀양, 양산의 3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밀양은 나노-바이오, 양산은 실버-바이오로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합에는 밀양대학교의 자구노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여타 군소대학들처럼 밀양대학교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신입생 충원율이 악화되고 있었다. 강도 높은 자체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자 국립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로의 이전을 시도하였으나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로 사실상 흡수통합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로서도 밀양대학교를 흡수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캠퍼스 문제 해소, 생명과학 분야의 기반 확대, 교육당국의 지원 획득 등을 추구할 수 있었다.

경북대-상주대의 통합 논의는 현재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 2004년 12월에 양 대학은 양측이 참여하는 구조개혁공동연구단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2005년 2월에는 경북대 측에서 통합추진양해각서(안)를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고 있다. 현재 양 대학은 교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경북대학교가 통합추진양해각서(안)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통합 후 본부는 경북대학교에 두고 명칭도 경북대학교로 하며, 유사중복학과를 통합하는 대신 상주캠퍼스에는 한국어, 혹은 외국어 교육을 담당할 어학타운 및 고시원을 두어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 대학의 통합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이 인구감소를 두려워하는 지자체의 반대라는 점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상주시는 시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주대학교의 일방적인 흡수통합에 대해 반대를 제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남권의 대학통합 노력은 거점국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경우로서 대학통합은 흡수통합의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상대-창원대의 경우를 보면 경상대학교가 창원대학교에 비해 규모가 두 배나 크지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양보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창원대학교의 요구사항은 경상대학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대되고 있다.

역으로 산업대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 통합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북대학교가 상주대학교와의 통합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이다. 물론 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조심스럽

게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단기적으로 통합 대학교의 수준은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경북대학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주대학교와의 통합 외에도 사립대인 대구대학교와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국립대가 사립대와 통합하려면 학교체제를 법인화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5월에 교육부가 국립대의 법인화를 허용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형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종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UCLA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상대학교 기획처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매개의 변증법과 국가의 흥망』, 『전후 50년의 한국 산업화와 국가』,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정치적 해석』 등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논문 및 연구보고서가 있다.

호남권

김 영 용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50개의 국립대학을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고 입학정원도 2009년까지 15% 감축하는 등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발표가 있기 전부터 신입생 수 감소에 직면한 사립대는 물론 국립대도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절감하고 이를 서두르고 있다. 광주·전남권 국립대인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여수대학교, 전남대학교 총장들은 2003년 6월 20일 5개 대학 연합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수십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2005년 1월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체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5개 대학의 통합을 포함한 개별 대학 간의 통합도 논의하며, 가능한 대학 간에 학과의 통합 및 교환 등에도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그리고 2005년 2월 15일까지 통합에 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여수대와 전남대, 그리고 여수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목포대와 목포해양대의 통합도 거론되고 있다. 이 중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여수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수대는 순천대와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전남대와 통합을 논의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립대 통·폐합 계획이 그렇듯이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합도 교수와 직원들의 100% 신분보장과 자유의사에 따른 캠퍼스 간 이동, 기존 캠퍼스의 유지 및 최대한의 학생 편의 도모 등의 기본원칙 하에 논의되고 있다. '여수대-전남대 통합기획단'은 5월 31일까지 통합계획서를 완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실무기획단은 각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작성한 후 모임을 갖고 5월 중에 종합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7월 중에 통·폐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대학을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산대와 익산대 통합 작업에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군산대와 익산대 통합에 전북대의 참여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립대 통·폐합은 대학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국가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대학 진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신입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일찍부터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학교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립대의 경우 그러한 유인이 작용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나태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직접적인 동기야 어쨌든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육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책적 수단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금전적 지원을 함은 물론 교수 T/O 배정, 각종 연구비 및 사업평가에 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각 대학에 이미 통보한 바 있다. 구조조정의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도에 잘못된 것은 없으며, 각 대학은 교육부의 의도대로 통·폐합의 유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어떤 조직의 구조조정에도 이런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므로 구성원들의 반발로 통·폐합 논의가 무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교육부와 각 대학이 현행 방법과 복안대로 통·폐합을 이룩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각 대학은 통·폐합의 기본원칙으로서 교직원의 신분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직원들의 반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부문에서나 구조조정은 조직의 신설과 퇴출 등의 재편과 그에 따른 인적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조정 없는 수평적 통·폐합으로는 국립대 개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대학 경쟁력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은 수평적 통·폐합을 한 다음, 차후에 내적 조정을 거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현행 방법으로 국립대를 통·폐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각 대학을 교육시장의 환경변화에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직면한 대학은 우선적으로 정원감축 노력을 할 것이고, 이로써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퇴출의 길을 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통·폐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장에 확실하게 퇴출구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국립대 교직원들을 공무원 신분에서 해제하여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처럼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다음 신입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다. 통·폐합을 위해 교육부가 투입할 세금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위적 방법이 아닌 시장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므로 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퇴출학교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NURI 사업 등,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반사업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퇴출에 직면한 대학들은 사력을 다해 따내려 하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교육부의 목표와 정책의 불일치부터 교정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국립대 유지에 따른 편익과 비용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학교설립과 운영을 위한 민간 주체의 재정이 부실했던 상황에서는 정부의 교육시장 개입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사학이 존재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고등교육에는 공공성이 거의 없으며, 설령 공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 국립대의 존립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러므로 국립대의 사립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신입생 선발, 등록금 자유화, 기여입학제 자유화 등 전반적인 교육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학교육

김영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Ohio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Texas A&M University와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Visiting Scholar로 활동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와 공공정책』,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식인과 한국경제』, 『시장경제의 이해』 등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